

청년 지역 정착 위한 맞춤형 정책 '집중'

전주시, 소통과 참여 기회 보장·지역 정착 이끄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등 분야별 정책 추진

전주시가 올해 청년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에 나선다.

특히 시는 민선8기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청년정책과를 중심으로 장기화된 코로나19와 경기 불황으로 힘겨운 청년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30일 기획조정국 신년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도 청년정책의 주요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2023년도 전주시 청년정책 주요 추진 방향은 △소통과 참여 기회 보장 △지역 정착 이끄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주거·교육·복지 등 분야별 맞춤형 정책 추진이다.

먼저 소통과 참여 기회 보장의 경우 시는 지난해 8월 개소한 청년들의 소통공간인 청년이음전주(청년센터)를 통해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취업 상담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청년 멘토 육성 및 네트워킹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시는 청년들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 정책을 직접 발굴하는 전

주시 청년희망단에 대해서는 올해 타 지역 선진지 벤치마킹 및 워크숍을 강화해 더욱 양질의 청년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일 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시는 지역대학·기업과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업 수요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사전직무 교육 및 현장교육을 제공하는 '전주 기업반'을 신설하고, 이후 지역기업에 취업한 학생에게는 취업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시에 시는 학업 등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들이 다시 전주로 돌아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자체 사업으로 '출향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전북 출향청년이 전주 기업에 취업할 경우 기업에는 기업지원금을 청년 1인당 매월 10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취업장려금을 2년에 걸쳐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으로,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고용 기회 확대, 청년들의 지역으로의 재유입을 촉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꾸준히 발굴해 청년에게 정규직 일자리와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유형에 따라 인건비와 직무교육비, 문화생활비 등 지역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지원된다.

이와 함께 시는 주거·교육·복지 등 청년들을 위한 각 분야별 맞춤형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시는 △장기간 취업 준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면접장장 대역 지원' 사업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 자기개발과 진로탐색을 위한 모험활동을 할 수 있는 청년소통공간 '비밀' 무료 이용 지원 △어학시험비 지원사업 등 청년정책을 새롭게 추진하거나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군부대 청년들의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과 창업, 결혼, 교육 등을 위해 목돈이 필요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 함께 두 배 적금'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시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역에

서 사회활동을 하는 청년 중 농·어업과 중소기업 등 6개 분야 종사하는 중 위소득 180% 이하 청년들에게는 청년 지역정착 수당을 지원하고, 미취업 청년에게는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청년활력수당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시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기존 58가구에서 82가구로 확대 운영하고,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매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하던 월세 지원사업도 부모와 독립해 생활하는 무주택 청년까지 확대한 청년한시세 특별지원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최라기 시 기획조정국장은 "경제활동의 주체인 청년들의 위기는 곧 지역과 나라 전체의 위기이며, 취업난과 경제위기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청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곧 지역과 국가의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이 정착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청년정책을 많이 만들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은경 기자

전북지역 지하수 수질 '양호'

수질조사결과 60개 지점 대상 기준 초과지점 없어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 2022년 전북지역 내 지하수 국가오염우려 측정망 수질조사결과 지하수 수질 기준에서 초과는 없는 것으로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하수 수질현황과 수질변화를 파악해 지하수 수질을 사전예방하고, 지하수 보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했다.

국가오염우려측정망은 전국 781개 중 전북지역은 60개 지점으로 '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도시지역, 오염우려하천, 분뇨처리장' 등 '지하수 오염우려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수질조사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하수 수질기준 일반오염물질(총대장균군 등 4종)과 특정유해물질(중금속 5종, 유기화합물

15종) 등 총 20개 항목을 분석했다.

조사결과 상반기 57개소와 하반기 60개소 모두 기준 이내로 나타났으며, 총대장균군은 생활용(비음용수)에서 2~3,800군수/100mL(기준 5,000군수/100mL) 범위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질산성질소는 생활용과 농업용에서 0.1~19.0 mg/L(기준 20mg/L), 공업용에서 0.2~11.6 mg/L(기준 40mg/L) 범위로 양호 수준이고, 중금속 5종과 유기화합물 7종은 모든 지점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차승원 전북지방환경청 측정분석과장은 "올해도 전북도내 지하수가 안전하고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병무청, '적극행정 살피소팀' 운영

국민 편의 제고 위해 개선사항 적극 발굴·불편사항 해결

전북지방병무청은 국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적극행정 살피소팀'을 운영한다.

이로 인해 기존 각 과장으로만 구성됐던 '지원반'에 유연한 사고를 가진 MZ세대를 추가 편성·운영해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고, 민원불편사항 개선으로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데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적극행정 살피소팀'은 '실시반 지원반'으로 구성됐다.

'실시반'은 실무직원 위주로 구성되어 현장에서 발생한 불만 민원 해결방

안을 모색하고 개선사항 등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지원반'은 각 과장과 MZ세대로 구성되어 실시반 회의 결과 점검이 된 사항을 검토하고, 실시반에서 도출된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권대일 청장은 "병무청에서는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국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 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 '시민 삶 속으로!' 현장행정 지속 추진

자원순환본부·도시건설안전국 대한 현장 업무보고

우범기 전주시장이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청소·공원관리·하천정비·시민안전 관련 현장을 찾아 보다 세심한 업무추진을 주문했다. 앞서 우 시장은 계묘년 새해를 맞아 지난 11일부터 전주의 대변혁을 앞당기기 위해 주요 핵심사업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30일 전주시 대표관광지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덕진공원과 하천 통합문화공간이 조성되고 있는 전주천 일원을 차례로 방문해 자원순환본부와 도시건설안전국에 대한 현장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우 시장은 먼저 덕진공원 연화정도서관에서는 △청소행정 혁신 △시민친화적 공원·가로수 관리 △정원의 산업화 및 관광자원화 등 자원순환본부의 올해 주요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우 시장은 또 덕진공원 호수의 생태적 건강성 회복을 위한 바다퇴적물 준설과 관정추가 개발 등 수질개선 및

수원확보를 위한 사업들과 덕진공원 입구 전통담장길 조성사업 등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주문하기도 했다.

우 시장은 이어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인근 전주천을 찾아 하천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화장실 설치와 산책로 조도개선, 계절 꽃 식재 등 다양한 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하천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속도를 내줄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우 시장은 △전주 도시계획 규제완화 △재난안전상황 관리 강화 △불법 현수막 정비 △가로등 조도개선 등 2023년 도시건설안전국의 주요업무계획을 점검하고, 도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재난재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오랜 기간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덕진공원이 전주를 대



우범기 시장은 30일 전주시 대표관광지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덕진공원과 하천 통합문화공간이 조성되고 있는 전주천 일원을 차례로 방문해 자원순환본부와 도시건설안전국에 대한 현장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화가 꽃피우는 한국전통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동시에 시는 치수와 이수, 친수, 생태 등 하천의 주요기능을 고려해 체계적이고 특성화된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천종합정비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전주의 대변혁을 이

워내기 위해서는 먼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안전 문제와 청소행정, 공원, 가로수 관리, 하천 정비 등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거나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사업들은 차질 없이 절차를 이행해나가고, 즉시 시행 가능한 사업들은 시민들이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양은경 기자

전주시 완산구, '완산 희망 가득 나무' 전시 성료

사해 소망·응원·격려 내용 담은 100여건 희망 메시지 카드 전시

전주시 완산구는 지난해 12월 '사해 소망, 응원, 격려 문구, 2023년 완산구'에 바라는 메시지 작성' 등 완산구민과 함께 마련한 '2023 완산 희망 가득 나무' 전시를 1월 31일을 끝으로 종료한다.

'2023 완산희망가득나무'는 2022년도 성탄절 기간에 맞춰 방문객들에게 따뜻한 감성과 불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완산구청 1층 로비에 설치됐다.

완산구 희망가득나무에는 전시 기간 동안 구민들의 총 100여 건의 카드가

접수돼 전시로 이어졌다.

완산구 '희망 가득 나무'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 구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등불로서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으로 구민들의 설명이 뒤따르고 있다.

염익준 완산구청장은 "올 한해 동안 모든 구민이 '희망가득나무'에 담긴 소원을 성취하길 바란다. 여기에 구민들이 바라는 맞춤형 행정을 위해 더욱 더 펼쳐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